



Announcement

자동차용 타이어 안전기준 개정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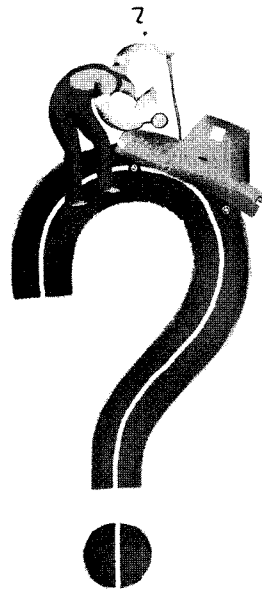
최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서는 자동차용 타이어 안전기준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자동차 안전 기준 개정 추진 조치는 세계 각국이 자동차용 타이어 품질 관련 인증 제도를 강화 또는 추가 신설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자동차용 타이어 관련 현재의 제도 운용 수준으로는 해외 저 품질 제품의 유입으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정부와 업계의 의견이 합치된데 따른 것이다.

현재 자동차용 타이어에 대한 안전인증은「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하의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을 준용하게 되어 있다. 이에 따른 제품 검사는 내구성능, 고속내구성능, 타이어강도(파괴에너지), 비드이탈 시험 등 4가지로, 이 중 내구성능과 고속내구성능 시험은 자율안전확인 신고 의무자가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안전성 시험 검사 설비를 구비하고 의무자 스스로가 시험검사를 실시하는 '자체시험' 및 국제기준 또는 이와 동등한 기준에 의하여 인정을 받은 시험 검사 기관에서의 시험 즉 '제3자 인증'이 가능하다. 하지만 나머지 타이어강도와 비드이탈 시험은 한국화학시험 연구원에서 검사를 통과하여야 하며, 검사 대상은 국가별, 공장별, 용도별(승용차용, 소형트럭용, 트럭버스용), 구조별(레이디얼, 바이어스)로 각각 1가지의 규격이 적용된다.

이번 개정 추진 하에서는 이러한 자율안전확인제도 상의 시험 요건을 비롯한 안전기준이 EU지역의

UN/ECE Regulation과 부합되도록 시험 수준을 사실상 상향 조정하게 된다. 검사 종류에 있어서는 기존의 타이어강도와 비드이탈 시험이 없어지고 내구성능 시험, 고속내구성능 시험에서의 요건이 상당히 강화될 뿐만 아니라 검사방법의 모델 구분은 종류(용도, 구조), 규격(단면나비, 편평비, 림지름, 속도기호, 하중지수) 및 패턴별로 세분화된다.

조만간 개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이 정리 되는데로 지식경제부의 입법예고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번 개정이 이루어지면 타이어 사용상의 소비자 안전도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Announce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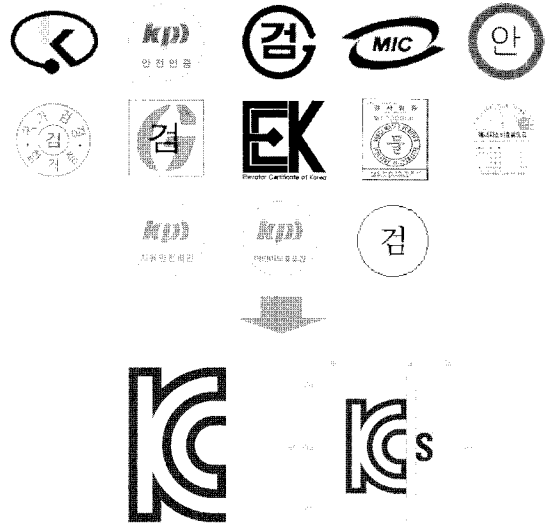
국가인증마크 통합제도 도입

각 정부부처마다 제품의 인증 마크가 다르고 그 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중복인증에 따른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소비자들의 좋은 제품 선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가통합인증마크(KC, Korea Certification))제도가 도입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인증제도는 법정강제인증 39개, 법정임의 59개, 민간인증 60개 등 총 158개로서, '제품 안전'이라는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부처마다 인증마크가 달라 중복해서 인증을 받아야 하는 데서 오는 불편함과, 시간과 비용의 낭비 뿐만 아니라 국가간 거래에 있어 상호 인증이 되지 않아 인증을 받아야 하는 등 국제 신뢰도 저하와 국부 유출의 문제를 초래하여 왔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국가통합인증마크(KC마크) 도입 등을 반영한 국가표준기본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범정부적 국가표준인증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총괄 조정하는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국가표준인증 종합관리시스템은 20개 유형의 법정강제인증의 인증심사절차를 국제기준(ISO/IEC Guide 67)과 부합화 시켜 국내실정에 맞도록 9개 유형으로 간소화하는 것과, 기존의 13개 법정강제인증마크를 KC마크로 통합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법정강제인증 마크의 통합화에 있어 지식경제부는 09.7.1부터 9개 인증제도에 우선 도입하고, 11.1.1부터 전 부처로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 인증분야 부기표가 안전(S), 품질(Q), 환경(E), 보건(H)

향후 KC 마크가 도입되면, 소비자에게는 제품에 붙어 있는 다양한 인증마크로 인한 혼란을 없앨 수 있고 양질의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어 제품 선택 시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이는 이점이 있고, 기업은 One stop 인증시스템 구축으로 중복 인증에 따른 기업의 경제적 부담과 인증 소요기간이 단축된다. 또한, 정부입장에서는 규격 제·개정 비용, 물품 및 용역 부문의 낭비 요인을 차단하여 예산 절감이 가능하며, 국가 전체로는 국제무대에서 국제 표준화 기준에 맞추어 기술무역장벽에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고 글로벌 브랜드 육성을 통해 인증 관련 산업을 수익 창출 지식서비스 산업으로의 전환을 가능케 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K**